

- 2023년 11월 중 -

불법어업 지도·단속 사전예고 안내문

추진목표

- ◆ '선(先) 지도, 후(後) 단속'을 통해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및 불법어업 예방, 투명·공정한 행정 구현

1 육·해상 지도·점검 계획

□ 오징어 공조조업 및 채낚기 광역위반 점검·단속

- 공조조업(트롤-채낚기) 및 채낚기 광역설비 위반, 불법개조 등 불법조업 의심어선 위치·항적 모니터링 및 드론활용 증거 수집·채증,
 - (주요대상)* 공조조업(트롤-채낚기), 128도 이동조업금지(대형트롤), 광력기준 위반(채낚기), 현측식 트롤 선미식 조업 행위(동해구중형트롤) 등
- * 불법어업 행위 및 민원 발생 시 관계기관(지자체·해경·수협 등)간 합동단속 시행
- (집중단속) 어선위치발신장치(D-MF/HF, AIS, V-Pass 등) 미작동 및 조작·훼손, 배터리부 전원 스위치 설치 행위 등

□ 경남 대구호망 및 새우조망 불법어업 합동단속

- * (기간/참여기관) '23.11월~'24.1월 / 경남도(주관), 동해어업관리단, 부산시, 해양경찰
- (새우조망) 경남 새우조망 어선들의 조업구역 이탈(부산지역), 혼획율 위반, 어구(날개그물, 막대 등) 위반, 혼획저감장치 미부착, 입·출항 미신고,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
- (대구호망) 무허가 및 허가구역을 벗어나 진해만(실리도~칠천도) 및 형제도(나무섬~남형제도) 인근 해상 호망어구 부설

어선 위치·항적 모니터링 및 육·해상 드론촬영

□ 동해안 대게 불법어업 합동단속

* (기간/참여) '23.11월~'24.1월 / 경북도(주관), 동해어업관리단, 해양경찰, 연안 시·군

- (위반행위) 암컷, 체장미달 대게 포획·유통·판매 및 '통발 대게 포획금지, 대게·붉은대게류 통발사용금지구역(주11해역)' 위반 등

< 중점 단속대상 >

◆ 암컷 및 체장미달(9cm이하) 등 불법대게 포획·유통·판매 행위

* [법령근거]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14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, [어업정지] 암컷대게(1차 30일, 2차 60일, 3차 취소) / 체장미달(1차 30일, 2차 45일, 3차 60일)

◆ 통발어업 대게 포획금지, 대게류·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구역 위반

- 경북(경주~울진) 수심 420m 경계선 내 대게포획금지(연중, 주11해역)

* [법령근거] 「수산업법」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[어업정지] 1차 20일 2차 30일 3차 40일

◆ 그물코 금지 규격(통발 150mm이하, 자망 240mm이하) 위반

* [법령근거] 「수산업법」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[어업정지] 1차 20일 2차 45일 3차 60일

◆ 대게 TAC 초과어획 및 어획량 미보고·거짓보고*, 사매매** 행위 등

* [법령근거]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38조에 따라 500만원(초과어획(어업정지 1차 30, 2차 45, 3차 60)) 및 300만원(미보고·허위보고(어업정지 1차10, 2차 15, 3차 20) 이하의 벌금

** [법령근거]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, [어업정지] 1차 30, 2차 45, 3차 60

- (대게미끼 사용) 연·근해통발 암컷대게 포획 후 고둥·새우 통발 미끼사용 행위 강력 단속

- (육상선별) 조업여건의 열악함 등을 이유로 항·포구로 회항하여 육상 선착장에서 암컷 및 어린대게 선별행위 집중점검·지도

* [법령근거] 「수산업법」 제7조에 따라 80만원 과태료 부과

- (어구실명제) 연·근해 자망·통발 어구실명제 미이행 지도·단속

(예시)

어구 소유자의 성명(연락처) : ○○○(000-0000-0000)

허가어선의 명칭(어선번호) : ○○○호(어선번호)

사용어구의 일련번호 : 10-1[사용어구의 총 개수(통수, 틀수 등)-해당 어구의 일련번호]

* 「수산업법」 제7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어업정지(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)

□ 조업 및 어구사용 금지구역 위반행위 감시

- 관할해역 근해업종(동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, 서남해구외끝이·쌍끝이중형저인망, 동해구중형트롤 등)의 조업구역* 및 조업금지구역** 위반감시
 - * 조업구역 :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동해구-서남해구 저인망 조업구역 분리(수산업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관련 [별표 5] [사법]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/ [행정] 어업정지(60일, 90일, 취소)
 - ** 조업금지구역 : 「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및 [별도1] [사법처분]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[어업정지] 1차 60일, 2차 90일, 3차 취소

□ 기타 위반행위 감시

- (TAC) 살오징어 등 TAC 대상 어종 및 업종의 초과 어획, 어획량 미보고·거짓보고, 사매매 행위 등 육·해상 감시
- (채낚기) 어구사용 금지구역* 및 겸업허가 근해자망 조업구역** 위반 행위
 - * (강원~울산) 5천5백미터 이내(1.1.~8.31.), 2천 7백미터 이내(9.1.~12.31.)
 - ** 북위 38도37분·동경135도30분, 북위 39도 51.75분·동경 134도11.5분, 북위 38도 37분·동경 132도59.8분, 북위 38도37분·동경132도37분, 북위 38도00분·동경 132도50분, 북위 38도00분·동경 135도30분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
- (근해자망) 근해자망 살오징어 포획금지 구역* 위반 행위
 - * 동해 전해역과 동경 128도 30분선(부산·울산·경북·경남 허가어선은 129도) 기준 동쪽의 남해해역
- (무허가 어업) 소형기선저인망(“고데구리”) 조업 어선 불법어구 적재·은폐 및 출·입항 미신고,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에 대해 집중 관리

□ 접경수역 우리어선 안전관리 및 외국EEZ 침범 예방

- 외국EEZ 경계선 근접조업 어선(서남구저인망·채낚기·자망 등)에 대한 지도·홍보를 강화하고, EEZ침범 조업 위험이 있을 시 사전차단
 - GPS 플로터 등 항해장비의 세계측지계(WGS-84) 사용
 - * ①‘동경측지계’와 ‘세계측지계’의 혼용 사용으로 인한 항행 위험 주의, ②동경측지계로 사용한 어장위치(좌표)를 세계측지계로 사용시 반드시 좌표 변환

일본 측, 우리어선 무허가 침범조업 나포·단속 강화 예고

2 어선법

□ 장거리 위치발신장치(D-MF/HF) 설치 및 상시작동 지도·단속

- (상시작동) 해상디지털 통신장비 설치사업 의무설치기한이 만료된 업종*을 대상으로 D-MF/HF 미설치·미작동** 행위 중점 지도·단속
 - 장비를 고의로 미작동하거나, 어선 상시전원이 아닌 배터리모드로 동작하는 등 위치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어선 집중점검
- * 근해통발, 근해연승, 근해채낚기, 근해자망, 근해장어통발, 대형트롤, 쌍끌이대형저인망,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, 외끌이대형저인망,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
- ** 어선법 제21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과태료 부과(1차 100만원, 2차 200만원, 3차 300만원)
- (고장신고)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사실 미신고, 고장신고 이후 수리 등의 조치 미이행 시 어선법 제5조의2 의거 과태료 부과
- *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·분실 시 지체없이 관할 해경파출소(해상-어선안전조업국 또는 경비함정)에 신고 후 15일 이내에 수리 등의 조치 필요

3 어선안전조업법

□ 주요 내용

- 「어선안전조업법」에 따른 출입항 신고 이행 철저
 - * 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 : 특정해역,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어선출입항 신고(확인)서를 신고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어선에 갖춰 두어야 함
- 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신고기관에 출어등록
- 기상특보(태풍·풍랑·폭풍) 및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어업지도선, 해경함정의 이동 및 대피명령 준수, 구명조끼 의무 착용
- 특보 발효 시 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를 위해 어선의 위치보고 준수
 - * 1일 1~3회 위치보고+풍랑특보(12시간 마다), 태풍특보(4시간 마다)시 추가 위치 보고

□ 지도점검 계획 : 11월 중

- 지역/대상 : 부산, 경남 / 관리기관, 선박 등 공급대상 사용자
- 주요 점검사항 : (해·내수면) 관리기관 공급중지 기간 중 부적정 공급 여부, 사용자의 공급대상 존재 여부, 낚시어선업 공급 조건 충족 여부 등 (기타) 구비서류 관리현황 등

< 기타 면세유 사용금지 철저 요청 >

- '15. 7. 1.부터 과징금 납부해도 해당 불법어업 어업정지 처분에 상응하는 기간
 - * 「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 제20조 제8항
- 양식장 관리선 소유한 어업인이 본인 양식장 관리를 위해 공급받은 면세유를 타 양식장의 어장관리를 목적으로 어선 이용(승인) 시 사용불가('용도 외 사용' 해당)

□ 관리기관·어업인·석유판매업자별 주요 점검사항 : [붙임1] 참고

□ 주요점검 사항

점검 대상	점검내용	제재 사항
관 리 기 관	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카드 등 발급	가산세* 징수 * 감면세액의 100분의 40
	②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발급	가산세* 징수 * 감면세액의 100분의 20
어 업 인	①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어업경영 사실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,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취득·양도 또는 사망·이어(離漁)등으로 신고 내용에 변동 사항 발생 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동내용 미신고	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
	②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와 그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	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
	③ 어업기계 및 선박의 사용실적, 어업기계 및 어업용 시설의 생산실적을 최종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	1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
	④ 어업용 외 용도 사용(자동차, 가정용 보일러, 무허가 어선 및 시설 등)으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사유 발생 시	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
	※ 상기 4가지의 사유로 면세유 사용 불가 시, 그 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 포함	
	⑤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와 그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	감면세액 + 가산세* 추징 * 감면세액의 100분의 40
	◆ 그 외, 면세유 사용 불가 기간 안내 ◆ - 어업 등에 대한 제한(취소, 감척 등) 등으로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→ 해당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- 「수산업법」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→ 과징금(감경하거나 가중하기 전의 금액 기준)에 상응하는 정지처분 기간	
석유 판매 업자	① 신청하여야 할 환급·공제세액을 초과 신청	감면세액 추징
	②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·공제세액 신청	감면세액 + 가산세* 추징 * 감면세액의 100분의 40
	※ 감면세액 추징 사유 발생 시, 관리기관 중앙회는 면세유 판매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일로부터 5년간 면세유 판매불가(조특법 제106조의2 제13항)	

어선법 주요내용



어선위치발신장치 의무설치 및 상시작동

어선은 **설치의무대상인 어선위치발신장치**를 반드시 갖추고 이를 **상시작동**해야 합니다.

※ 고장·분실 시에는 해양경찰청에 신고한 후 15일 이내에 수리 또는 재설치

|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기준 |

2톤 미만	V-PASS, VHF-DSC, e-Nav 선박단말기, AIS(4개 중 1개 선택 설치)
2톤~10톤 미만	VHF-DSC, e-Nav 선박단말기 MF/HF 또는 D-MF/HF(모두)
10톤 이상	VHF-DSC, AIS, e-Nav 단말기, D-MF/HF(모두)

무등록 어선의 사용 금지

어선의 소유자는 그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**어선원부 등록**을 하여야 합니다.

※ 무등록 어선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
선명, 선적항은 규정에 맞게 표시

선수 양현에 선명, 선미외부에 **선적항·선명**을 표시(10cm 이상)해야 합니다.

※ 선명선적항 미표기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은폐·변경·제거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
시기와 사용 목적에 맞는 어선검사

어선은 그 설비, 복원성의 승인·유지 및 만재출수선의 표시에 관해 아래와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해요.

건조검사	최초 건조 시
정기검사	최초 항행 시 또는 검사증서 유효기간 만료 시
중간검사	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수검 (제1종, 제2종 중간검사)
특별검사	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 시
임시검사	어선 개조, 검사증서 내용 변경 시

어선검사 이후 어선의 상태유지(불법 중·개축)

어선검사를 받은 후 선체·기관·설비를 변경하거나 설치하면 안되고, 그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·운영되도록 **상태를 유지**해야 해요.

<주요 불법 중·개축 위반유형>

- ▶ 조타실 뒤 바람막이 또는 선원휴게공간 임의증설
- ▶ 선축 & 선미 부력부 임의증축
- ▶ 선수 조업준비공간 바람막이 공간 임의설치 등

무등록 어선중개업의 금지

어선에 대한 매매·임대차 중개를 하려는 사람은 어선 중개업의 등록을 해야 해요.

어선을 중개거래로 사고팔 때는 중개인의 **어선중개업 등록 여부**를 확인해주세요!

어선안전조업법 주요내용



출입항신고 내용 변경(변동 있을 시)

승선원명부, 조업 업종, 평균조업일수 등의 변동이 있을 때는 **신고기관(관할 해경 파출소)**에 신고해 주세요!

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및 조업 제한

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**출항이 제한**될 뿐만 아니라, 이미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에 대해서도 **조업이 제한**될 수 있어요.

구명조끼 착용

태풍·풍랑특보, 예비특보 발효 중 **외부의 노출된 갑판에 있는 승선원**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해요.

위와 더불어, 승선 인원이 **소규모인(2인 이하)** 어선의 승선원은 **구명조끼를 상시 착용**해야 합니다.<시행 2025. 10. 19>

※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구명조끼 미착용자와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선장에게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어선 안전점검 자가 진단



1. 선체 점검	발생	미발생
① 선수, 선축, 선미의 균열이나 구멍		
② 상갑판, 양현 측판 손상이나 균열		
③ 씨앵커·아구·로프류 정리, 고박 불량		
2. 조타실 점검	양호	불량
① 조타기, 클러치 레버 작동		
② 플로터, 레이더 등 항해장비 작동		
③ 소화기 비치 및 유효기간, 가스압 등		
3. 통신설비 점검	양호	불량
① VHF-DSC, SSB, D-MF/HF 등 무전기 송수신상태		
② 위치발신장치 작동상태 (V-PASS, e-Nav, AIS, D-MF/HF 등)		
4. 기관실 화재 예방	양호	불량
① 누유, 누수 및 가스누출 여부		
② 기름길레 등 인화성 물질 관리상태		
③ 화재탐지경보장치 정상 작동		
④ 기관실 내 자동소화장치 설치 여부		
⑤ 기관실 내 소화기 비치 여부		
5. 엔진 시동 점검	양호	불량
① 실제 연료량과 계기판의 눈금 일치 여부		
② 연료탱크에 물고임 여부		
③ 냉각침수량 및 해수 흡입밸브 개폐 여부		
④ 주기판과 엔진벨트 볼트 체결상태		
6. 엔진 시동 후 점검	양호	불량
① 표시반 상태(회전계, 전류계, 온도계, 유압계)		
② 이상진동 및 이상음 발생 여부		





카카오톡 채널 '어업정보 알리미'

어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, 사전예고제 등을 안내해 드려요~



어업정보 알리미
친구 추가 QR코드

해양수산부
동해어업관리단





불법어업 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

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드립니다.

신고대상

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을 위반한 불법어획물의 유통·판매 등 행위

포상금

불법어업, 불법어획물 유통·판매 등 신고 시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600만 원 까지 지급
*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포상

신고처

불법어업신고센터 국번없이 **1588-5119**
동해어업관리단 051-410-1030~3(eastship.mof.go.kr)

- SNS 간편제보 :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'동해어업관리단' 친구 추가

신고방법

불법어획물 유통·판매 목격 시

- 전화신고 : 위치·상호·판매장소 등 불법행위의 정황
- SNS신고 : 불법행위의 정황과 그 정황이 담긴 사진, 동영상 전송

※ 대한민국 모든 국민 또는 외국인(어선원)이 신고를 할 수 있으며,
신고자 신원 보호(익명 신고자 포상금 미지급)